

김정일 행정법 강의계획서

“정확한 기출문제풀이와 최신판례 및 주요사례 정리를 토대로
중요이론을 정리하고 핵심논점을 확인하며,
행정법 연습사례 풀이를 통해
올바른 사안포섭과 사례해결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강의!”

■ ■ 담 당 김 정 일 변호사

- 사법시험 제40회 최종합격
-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건국대, 경희대 행정법 특강 강사
- 現) 법무법인 백범 구성원변호사

■ ■ 강의일정 2017년 11/21(화) ~ 12/8(금), 총 16회 ※ 격일(주 3회 : 화, 목, 토), 1시간 / 50점 모의고사 진행됩니다.

■ ■ 시 간 [오후 실강반] ※ 실강반에도 필기자료를 제공합니다

- 1) 시험이 없는 날 : 1시 40분 ~ 5시 50분(단 11월 22일(수)은 오후 1:40 ~ 5:30)
- 2) 시험이 있는 날 : (시험) 1시 ~ 2시 / (강의) 2시 10분 ~ 5시 50분
- ※ 개별 질문 및 답안지 상담 : 매일 6시 ~ 7시

[당일 저녁영상반]

- 1) 시험이 없는 날 : 6시 40분 ~ 10시 50분
- 2) 시험이 있는 날 : (시험) 6시 ~ 7시 / (강의) 7시 10분 ~ 10시 50분

[익일 오전영상반]

- 1) 시험이 없는 날 : 8시 40분 ~ 12시 50분
- 2) 시험이 있는 날 : (시험) 8시 ~ 9시 / (강의) 9시 10분 ~ 12시 50분

- ## ■ ■ 강의교재
1. 주교재 : 행정법연습사례(월비스刊, 김정일, 서점구매)
기존 행정법정선사례집에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들과 최근 5년간(5급공채,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들 및 대학모의고사에 출제된 문제, 김연태, 박정훈, 박균성 교수님의 사례집에 있는 중요문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입니다. 이 연습책만 여러번 반복하면 시험장에서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합니다(유제문제까지 포함하여 총 130여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법연습사례에 수록되어 있는 사안포섭을 자세히 검토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2. 판례 및 핵심쟁점자료(무료제공)
이 자료는 최신 판례들을 모두 수록하고 답안지에서 반드시 현출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3. 5급 공채시험용 법전
 4. 2순환용 사례정리자료(무료제공) + 행정법 사례풀이방법(무료제공)
 5. 2순환용 최신판례정리자료(2017년 기본서에 미반영된 내용까지 추가, 무료제공)

비례원칙

- ① 출제가능성 : A
- ② 출제예상됨 : 갑시장의 술에 대한 영업정지는 위법한가? 갑시장은 술에게 파면처분을 할 수 있는가? 불필요한 토지를 포함한 사업구역에 대하여 사업인정을 할 수 있는가? 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한가?
- ③ 쟁점 : 불쌍하거나 행정처분이 너무 과도하다고 여겨지면 비례원칙위반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요즘에는 잘 출제되지 않으나 재량행위에 대한 거부처분의 위법여부를 두리쫄살하게 물거나 부관의 위법여부를 두루뭉술하게 물으면 비례원칙위반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④ 기출문제 : 2005년 사법시험 / 2011년 5급공채 / 2013년 입법고시 / 2014년 5급공채 / 2016년 5급공채 - 행정법연습 쟁점 2 기출문제 참조.
- ⑤ 최근 3년간 최신판례 : 없음
- ⑥ 출제예상가능 판례 : 불필요한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에 대한 판례 /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영업정지 6개월처분에 대한 판례

I. 비례원칙의 의의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과 수단간에는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과잉(조치)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II. 법적 근거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필요한 경우'라는 표현으로부터 인정되는 헌법상 원칙이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등 법률에도 인정되고 있다. 물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모두 비례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III. 비례원칙의 내용

① 공익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하고(적합성 원칙), ② 적합한 수단들 중에서도 국민에게 최소침해 수단이어야 하고(필요성 원칙), ③ 최소침해수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비교 형량시 사익이 더 크지 말아야 한다(상당성 원칙). ④ 위 세가지 원칙은 단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고 어느 한 원칙만 위반하면 비례원칙위반으로 위법하다.

IV. 사안의 경우

평등원칙

- ① 출제가능성 : B
- ② 출제예상됨 : 갑시장의 술과 달리 병에게 파면처분을 할 수 있는가? 갑시장은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10년동안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의 개인택시면허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가?
- ③ 쟁점 : 합리적 차별사유 없이 차별적인 행정작용을 하면 평등원칙위반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선행관행이 있는데 그와 달리 한 경우에는 자기구속원칙위반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자기구속원칙은 평등원칙보다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④ 기출문제 : 2014년 변호사 시험 - 행정법연습 쟁점 4 기출문제 참조.
- ⑤ 최근 3년간 최신판례 : 없음
- ⑥ 출제예상가능 판례 : 신청일 당시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10년동안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례

I. 의의

평등의 원칙이란 동일한 사안에서 합리적인 차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기관은 차별적 행정작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II. 근거

일부견해는 평등원칙을 헌법 제11조에 직접 근거하는 성문법원으로 보고, 일부견해는 평등원칙을 헌법 제11조로부터 도출되는 불문법원으로 본다.

III. 요건

첫째, 동일한 사안일 것, 둘째 행정작용이 차별에 해당될 것, 셋째,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차별목적의 정당성, 차별수단의 적합성, 차별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순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판례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라고 판시하고 있다.

IV. 한계 - 위법앞에 평등없다.

위법행위에 대하여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V. 사안의 경우

강의특징

1. 사례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행정법의 모든 쟁점을 사례화하여 정리한 “행정법 연습사례”를 통해 사례문제의 쟁점을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학습
2. 최근 10개년 기출문제에서 중요도 높은 문제들에 대한 쟁점별 해설을 통해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정리
3. 행정법 최신판례 및 핵심쟁점자료를 활용하여, 반드시 암기할 부분과 이해할 부분을 정리하고 행정법 주요내용을 점검
4. 최근출제경향과 최신판례 등을 적극 반영한 신작모의고사를 통해 문제해결능력과 실전감각을 향상
5. 강사가 직접 수강생들의 답안을 참고하여, 수강생의 입장에서 답안 작성 시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답안작성 관련 중요한 사항은 수업시간에 언급하며, 매일 강의 종료 후 1시간동안 1:1 Q&A 및 답안첨삭을 진행

강의목표

이번 강의의 첫 번째 목표는 사례문제에 대한 논점을 빠짐없이 파악할 수 있는 능력습득입니다. 이는 행정법연습 앞부분과 행정법 들어가기 자료를 2순환 기간 동안 4번만 반복하여 보시고 강의시간 동안 사례문제를 같이 풀어봄으로써 가능합니다.

이번강의의 두 번째 목표는 고득점 답안작성방법의 습득입니다. 이는 판례문구의 정확한 분석과 학설의 논거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출제가능한 중요쟁점에 대하여 기존 책에 서술되지 않은 내용을 강의시간에 필기를 통해 정리하여 65점 이상의 답안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강의와 차원이 다른 새롭고 완벽한 강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7년 5급 공채시험에서도 입증된 것처럼 제가 강의시간에 강조한 내용이 그대로 시험문제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시켜드릴 것입니다.

강의중심

2순환강의에서는 예비순환, 1순환을 통해 학습한 행정법의 중요내용을 확인하며 사례문제풀이를 통해 심화이론을 적용하고 답안작성을 반복적으로 연습하여 실제 시험장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는 실력을 완성할 것입니다.

아직 행정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행정법연습 초반부분과 행정법 들어가기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어 행정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며, 강의 시간에 병행되는 답안작성요령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법전반에 대한 이해가 확립되어 있는 수험생들은 2순환 모의고사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법 연습에 있는 사례문제들을 직접 답안지에 작성하며 강의시간에 진행되는 사안포섭 및 학설과 판례의 정확한 이해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번 2순환은 강의시간에 행정법연습에 기재되어 있는 사례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도록 학습함과 동시에 기존에 평면적으로 배웠던 학설과 판례에 대하여 사례와 연계한 입체적인 제대로 된 이해(고득점 할 수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강의하겠습니다.

강의는 사례문제풀이(80%), 학설 및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20%)로 진행합니다.

수년간 5급 공채 시험에서 입증된 것처럼 1, 2, 3 순환 모의고사 및 사례풀이에서 푼 문제들이 그대로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바, 이번 모의고사문제도 최신판례를 사례화하여 출제하고, 최신대학모의고사를 반영하여 출제합니다.

■ 사례풀이
강의(2순환)의
중요성

최근 7년간 5급공채,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에서 행정법 문제는 모두 사례문제로 출제되었으며 과거와 달리 분설형 문제로 출제된 것이 특징입니다. 분설형 문제란 이미 문제에서 대략적인 논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예컨대 '위 사안에서 청문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었는가?'라고 물어보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분설형 문제는 논점 파악이 쉽기 때문에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물론 2015년 5급공채 시험문제처럼 '잔여지수용'이라는 평소에 공부하지 않은 부분이 출제되면 그에 대한 답안작성은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행정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 수험생들 간의 점수 차이는 큼니다. 이유는 **학설과 판례에 대한 이해도, 답안작성방법 등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학설과 판례에 대한 이해도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컨대 의무이행소송 인정 여부에 대하여 부정설은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 침해를 논거로 들고, 긍정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러한 내용을 암기해서 답안지에 현출하는 것과 '행정처분은 법원이 아닌 행정청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를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이라 한다. 그런데 당사자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나 부작위를 하였다는 것은 행정청이 허가라는 처분을 안 하였다는 판단권을 1차적으로 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의무이행소송을 맡은 법원이 이러한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 행사에 대하여 복잡적으로 심리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복잡적 소송인 항고 소송의 본질에도 어긋나지 않고 법원이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대신 행사한 것이 되지 않아 권력분립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라고 답안작성을 하는 것은 엄청난 점수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시험은 암기력 테스트가 아니라 행정법의 학설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여 사안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답안작성방법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컨대 제3자인 재단법인이 환경오염을 야기 시키는 사업계획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적격충족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에 대해 수험생 대부분의 답안내용은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안포섭에서 '사안에서 사업계획승인처분의 근거법규나 관련법규가 재단법인의 사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 답안지와 '사안에서 재단법인은 자연인이 아닌 바 환경상 피해를 입을 수 없다. 즉, 재단법인이 소음이나 진동, 대기나 수질오염으로 피해를 받는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해 사업계획승인처분으로 원고인 재단법인이 침해받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또는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는바 재단법인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 답안지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출제교수님들 입장에서는 후자 답안지에 대하여 고득점을 줄 것입니다.

결국,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분설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설과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답안지에 현출시키는 부분인 '검토와 사안포섭'을 설득력 있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학습하고 숙달하는 순환이 바로 2순환**입니다!

진도별 강의내용(진도별 핵심논점)

강의회차	날짜	강의내용
■ 제 1 회	11월 21일(화)	행정법의 전체체계, 행정법 사례풀이방법
■ 제 2 회	11월 22일(수)	행정법 사례풀이방법 II
■ 제 3 회	11월 23일(목)	실질적 의미의 행정, 통치행위, 법률유보의 범위, 행정법의 일반원칙 (비례, 평등, 자기구속, 신뢰보호, 부당결부금지, 신의성실, 실권의 법리), 행정법의 효력(소급입법 및 소급적용금지원칙), 행정법 법원 상호간의 관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과 구별실익,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공무수탁사인
■ 제 4 회	11월 24일(금)	공권의 확대화경향(제3유형에서의 원고적격충족여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적극적 공권(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 행정행위발급청구권),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사법심사가가능성, 행정법관계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용법리, 하자의 효과, 신고,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
■ 제 5 회	11월 25일(토)	행정입법(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 제 6 회	11월 27일(월)	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 행정행위의 종류(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과 구별실익, 판단여지, 허가, 특허, 인가, 공증, 제3자효적 행정행위)
■ 제 7 회	11월 28일(화)	부관의 종류 및 한계,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선결문제,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 제 8 회	11월 29일(수)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과 구별실익,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여부 및 그 정도, 하자승계, 하자의 치유와 전환,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제 9 회	11월 30일(목)	공법상 계약,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계획, 행정의 자동결정, 행정절차법(처분절차, 절차상 하자가 독자적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
■ 제 10 회	12월 1일(금)	정보공개제도,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직접강제,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과징금과 부과금, 명단공표, 관허사업제한.
■ 제 11 회	12월 2일(토)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해석과 관련된 학설과 판례,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선택적청구권인정여부, 이중배상금지, 국배법과 자배법과의 관계, 국가배상법 제5조의 요건해석 및 제6조에 관련된 학설과 판례
■ 제 12 회	12월 4일(월)	손실보상 전반, 행정심판
■ 제 13 회	12월 5일(화)	행정소송I
■ 제 14 회	12월 6일(수)	행정소송II
■ 제 15 회	12월 7일(목)	행정소송III
■ 제 16 회	12월 8일(금)	행정법각론 전반

항상 행복하시고 꼭 합격하시길 기원 하겠습니다.